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두 번째 이야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일시	:	2017년 7월 13일 (목) 오후 3시
장소	: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
주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예총, 광주민예총
주관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대동문화재단, 광주장애인미술협회,
		한국장애인문화광주시협회, 진도북(춤)보존회 내드름,
		광주전남문회유산연대 한국문회산업연구소, 전통문회연구회 얼쑤
		광주마당, 윤상원기념사업회
후원	: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중 심도시지원포럼

■ 프로그램

사 회 : 송진희(호남대 예술대학장)

발 표	■ 김하림(조선대 교수)	■ 이병훈(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토 론	 ▶ 황병하(조선대 교수) ▶ 주정민(전남대 교수) ■ 김석웅(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 김기곤(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 선(호남대 교수)■ 소순천(아시아문회중심도시추진단장)

■ 목 차

1. 발표 (1)	김하림 조선대 교수	05
2. 발표 (2)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19
3. 토론 (1)	황병하 조선대 교수	33
4. 토론 (2)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37
5. 토론 (3)	주정민 전남대 교수	43
6. 토론 (4)	한 선 호남대 교수	55
7. 토론 (5)	김석웅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	59
8. 토론 (6)	소순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61

발표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과연 조성되었는가, 혹은 조성될 수 있는가?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과연 조성되었는가, 혹은 조성될 수 있는가?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도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추상적 앎의 단계가 있고 물상적 앎의 단계가 있는데 아직 우리는 추상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기가 사는 공간에 대한 물상적 앎이 없어서는 근거를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다. ... 문명의 실재는 도시에 있는데 역사적 사실만 기억하고 역사의 현장인도시를 모른다. 자신의 공간을 모르면 다른 시간과 공간을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니다. "(김 석철,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해냄, 1997)

1.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은 크게 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 혹은 ACC)'의 개관 전과 그 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조성사업의 핵심이 전당의 건립이고, 예산의 규모, 장소성, 시민들 및문화예술인들의 관심사도 대부분이 전당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015년 11월 개관을 중심으로 우리는 조성사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할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반기의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경과]

구분	기 간	내 용
1	2002. 12. 14	16대 노무현 대통령후보 "광주문화수도 육성" 선거공약 발표
	2003. 04. 08	노무현 대통령 광주문화수도 육성계획 특별홍보 지시
	2003. 05. 18	노무현 대통령,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메카 육성" 발표
	2003. 07. 30	동북아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기본계획 대통령 보고 : 광주시 도심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2	2004. 09. 09	문화전당 건립예정부지 '전남도청 일원' 확정(조정위 의결)
	2005. 08. 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종합계획 수립 착수
	2005. 1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제정 추진
	2005. 12. 30	문화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2007. 10. 0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대국민 보고회 개최
	2008. 06. 10	문화전당 기공식 개최
3	2008. 11. 18	문화전당 내 구)도청별관에 관한 시민토론회 개최
	2009. 02. 25	문화전당 공사 재개(일부 5.18 단체의 천막농성 해제)
	2014. 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준공(보전건물 제외)
	2015. 11. 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식개관

1) 2002년 이전

광주는 200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광주문화수도' 공약으로 '문화광주'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기 이전부터 '문화'를 통한 도시의 발전과 지속, 생산력확대 전략을 도모해왔다. 즉 〈①〉이전부터 광주의 장기적 도시 발전 핵심전략가운데 하나로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하나의 흐름이 대두하고 있었다. 2000년 11월광주시에 제출된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은 그런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광주라는 도시가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고, 가용 가능한 최적의 자원과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문화도시' 광주였다. 예향 광주의 전통, 광주가 그동안축적한 광주비엔날레와 5월 문화 등과 같은 문화자원, 역사적으로 축적된 남도 문화예술의 특성과 인적 자원 등이 장래 도시발전 과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광주문화산업진흥원'의 신설로 구체화되었고,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의 제시는 '광주문화재단'으로 정책화되었다.

또한 도청의 목포 이전, 시청의 상무도시 이전 등으로 인해 전통적 도심이었던 동구가 쇠락하기 시작했고, '도청'을 오월 공간으로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가중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했고, '도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장과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 중에 2002년 5월부터 8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논의된 '도심활성화 추진 관련 전문가 초청 목요강좌'가 광주시가 주최한 것도 그 증거 중의 하나일 것이다. (광주광역시. 『도심활성화초청목요강좌자료집』, 2002)여기에서도 '외국의 사례(김광우), 21세기 광주발전전략(김재철), 꾸리찌바 사례(박용남), 도시재생(이용연/조용준), 도심활성화와 문화예술의 결합(이상준)' 등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퐁피두센터'와 같은 복합문화공간의 건축의 필요성도제기되었다.(김하림, 「문화예술의 정책방향」, 앞의 자료집, 141-155쪽)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시대, 문화산업시대가 의 도래라는 흐름이 가세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문화도시 만들기를 하나의 '정책'에서 도시발전 '전략'으로 위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시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기반구축,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문화산업의 육성, 시민적 문화역량의 축적등을 통해 2010년 '한국 최고의 문화도시', 2020년 '동아시아의 유력한 문화도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문화광주'의 이념적 지향은 인권평화도시, 문화산업도시, 녹색환경도시, 역사관광도시로 설정되었다. (『빛과 생명의 문화광주 2020 기본계획』, 2001)

좀 장황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상기하는 것은 '조성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이겠지만, '조성사업'을 중앙정부의 시혜적

차원에서 해석하거나, 대통령의 특별관심으로 인해 '조성사업'이 진행된 것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주시민들이오랜 기간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도시재생-도심활성화'의 노력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광주시민은 '조성사업'에서 대상화될 뿐이다. 이 점은 역으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관건적 문제이다. 산업도시/단지나 '새만금프로젝트' 같은 이전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공약사업들은 주로 '토건적 관점'에 치우쳐있었고, 이는 일정 기간 국고를 투입하여사업이 완성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도시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며, 20세기 후반부터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강조하는 것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 참여가 성공의여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광주문화수도' 육성 공약은 노무현 후보로부터 비롯하였으나, 이미 광주라는 도시가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①) 이전은 '광주문화도시론'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이고,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내발적 발전 전략과 실천방안 모색이 고민되었기 때문에 '문화수도' 공약이 제시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①〉이전 '문화도시 광주'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하는 것은 이후 '조성사업'의 성격이나 주체의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전당의 개관 이전까지 발생한 여러 논의나 사건은 대부분 이 문제에서 발생한다.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당의 국제공모설계가 확정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만은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사나 중앙정부-문화부가 주관하기 시작한-는 제반 사업의 분야와 속도에 관심을 쏟기시작했다.

2) 오월과 전남도청 건물

그러나 〈②〉에서 확정된 사안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③〉의 사안이 발생한 것은 당연하며 예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청'을 어떻게 오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논의나 합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전당'이 도청 공간에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설계안이 확정되었을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지하공간에 전당이 위치하고 이는 도청을 보존하고 부각하기 위한 점이라는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게 부상하지는 않았다. 이른바 '랜드마크' 논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도청의 위상과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논쟁을 불식시켰다. 하지만, 설계안에 따라 '별관'의 해체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③〉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결국 일부 해체

로 타결을 보았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향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 점의 일차적 원인은 설계자와 발주처의 오월과 광주에 대한 이해의 부족, 설계 전의 서베이의 미흡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민주평화교류원의 구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성적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2. 전당의 기능과 역할

ACC 누리집(홈페이지)에는 그 목적,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Window of Asian Culture towards the World)

ACC는 아시아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입니다. 5.18민주화운동(May 18 Democratic Movement)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2015년 11월 개관한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입니다.

ACC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참여자들이 연구(Research) - 창작(Creation) - 제작(Production) 의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경계를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화합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ACC에서는 수집된 연구물과 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된 결과물로 1년 내내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축제, 기타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이에 근거한다면, ACC는 인권과 평화라는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은 후에 논의하기로 하되 먼저 문화부 산하기관 중에 문화공간에 대한 비교를 해보 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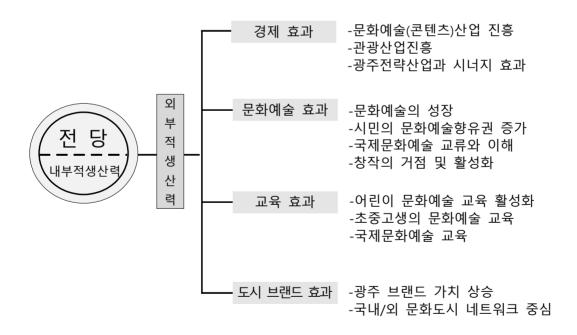
구 분		아시아문화전당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 전당
규 변적 모 연면적		134,815m²	295,551m²	166,478m²
		161,237m²	137,290m²	128,060m²
주요	요 시설	-예술 극장(대/중) -창조원(창제작센터/전시관)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문화정보원(연구소/자원센터/아카데미) -어린이문화원	-본관동(전시동/사무동) -부속동(카페/식당) -전통염료식물원 등	-오페라하우스(극장3) -음악당(공연장 3) -한가람미술관(전시관 2) -서예박물관 -야외무대
건	[립비	4,297억원 (2015.11 개관)	4,093억원 (2005년 준공)	1,455억원 (1988 준공, 1992 증설)
특 징		아시아문화	유물전시	공연 중심

전당의 규모는 연면적과 건립비 면에서 앞서 있다. (물론 예술의 전당 건립 시기와 현재의 화폐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으나) 국 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이나 전시를 구상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 예술의 전당은 공연 중심으로 각 장르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유리 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전당은 유물이나 소장품은 전무한 상태이다. 퐁피두센터의 성공은 기본적으로 프랑스를 위시한 세계적 작가의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실 복합문화시설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전당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이 전당이 지향해야 할 비전이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전시나 공연 중심으로 전당의 역할이나 기능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전당이 '아시아문화'를 표방한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은 다음과 같은 생산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논의한 대로 〈①〉 이전의 광주시민들의 소망과 기대가 전당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개관한 지 2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전당에서 펼쳐진 프로그램들은 그 방향성과 내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국박이나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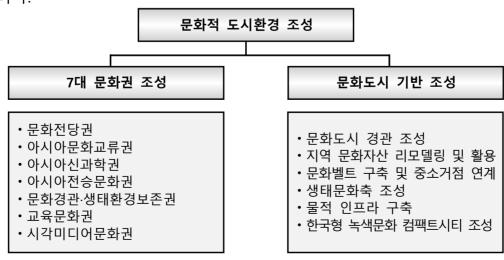
들과의 차별성도 그다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이며, 전당의 내부적 생산력이 안정화되고 증가되어야 이 문화적 폭발력 이 광주라는 도시로 확산되고 증폭될 것이다.

3.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강화]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당을 제외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이고, 이부분의 핵심은 '7대 문화권 조성'이다. 계획에 의하면7대 문화권 조성에 국비 15,027억원, 지방비 3,532억원 민자 8,780억원이 투입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은 답보상태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지난 10년간 중앙정부의 추진의지가 약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이 5;5인 상황에서 국비와 지방비확보가 어려운 점도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으로 조성사업이 전당 건립에 치중했던 관계로 대부분의 여타 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탈락하고 연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계획이 수정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7대 문화권이 전당에서 창조된 문화력이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을하도록 하기 위해 5개 구별 안배의 성격이 있다 보니 각 구청 단위의 사업중심으로 구상되는 측면도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문화권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다면, 전당은 자칫 고립된 섬으로 될 위험성이 있다. 이런 면에서도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 자체적으로 완결구조를 지니면서 전당과 연계되는 구도로 조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제대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 도시환경조성사업과 7대문화권

물론 문화권이 정확하게 지역별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고, 권역별 특성에 따라 문화적 현상이 특화되고 상호 네트워크 되는 개념으로, 각 권역별로 집중된 구체적 사업의 실천을 통해 문화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각 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기능을 고려하여 특화된 7개의 문화권 및 핵심거점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전당의 문화적 폭발력을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종합계획 수정계획(2013)에 의하면 구체적 계획은 다음과 같다.

문화권	기능 및 성격	문화거점(프로그램)
문화전당권 [국립아시아문화전 당 주변]	- 문화전당과 밀접한 연계 속에 도시의 문화에너지가지속적으로 순환축적 재생산되는 발아(發芽)지점 - 5.18광장,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서석로 주변 구도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아시아음식문화거리민주화 물길, 금남로 인권거리 조성 등
아시아문화교류권 [사직공원, 양림동 일대]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가 일상적으로 집적·교 류생산·판매·유통되는 공간 - 근대역사의 대표적 수용지 - 개화기 선교사 건축, 전통가옥 등 문화유산 풍부	사직공원재생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아시아음악타운다문화센터 조성 (다문화 음악축제 등)아시아예술인 공방촌 조성
아시아신과학권 [광산구 비아동일대]	- 아시아가 지닌 다양한 가치를 과학적으로 연구발굴하여 실용적 기술로 활용하는 방안 을 모색하는 공간 - 과학기술원, 첨단과학단지 등 인근 산학 연 연결망 구축 용이	- 아트산업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 운영 - 동서양 의과학(전승의학) 융합연구 및 신기술 개발단지 조성 - 산단 아트팩토리
아시아전승문화권 [대촌, 칠석동, 효천역세권]	- 아시아의 사고방식·행위양식과 놀이 문화의 가치체계·원리를 계승하여 재미 와 가치, 경제 적 수익의 추구를 통해 현 재화하는 공간 - 고싸움 전수관, 남도문화, 테마공원 등 민 속놀이 보존보전	- 고싸움 브랜드 개발 - 아시아전승문화 콘텐츠 개발 - 아시아전승놀이테마파크
문화경관 · 생태환 경보존권 [무등산·광주호 및 영산강·황룡강 일대]	-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자연과의 소통 및 체험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공간 - 상태 환경 보전 지역	생태문화공원 조성(영산강, 황룡강 합수부)광주둘레문화 생태보존 환경조성무등산권역 브랜드 조성아시아 아트컬쳐파크
교육문화권 [마 륵동공군 탄약고 부지]	 교육문화의 가치와 철학을 집중 투여 하고 실현하고 일상 활동에서도 교육 문화가 스며 드는 공간 각 구별 특성화교육과 관련된 장소 연계 	-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 - 문화예술 시범학교 운영 - 청소년 지식박물관 건립
시각미디어문화권 [북구 중외공원일대]	- 첨단 미디어기술로 시민들이 자기표현 · 계발 · 리모델링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상호소통형 미디어 문화공간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중외공원, 국립 광주박물관, 민속박물관 등 문화시설 밀집	- 중외종합예술공원 조성 -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 - 중외인터랙티브미디어센터

그러나 이 계획이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노정되어 계획이 수 정되었고, 향후에도 지역의 상황, 시의 정책,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바뀔수는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전당과 7대 문화권이 함께 활성화될 때 진정한 의미의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구축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는 일이다.

4. 오월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정합성 문제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19세기의 산물이다. 자동차나 전화는 물론 지금 우리들이 최첨단이라 생각하는 것들 —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연료전지, 우주비행, 더 나아가서는 인간형 로봇이나 생식(生殖) 테크놀로지까지 거의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그 기술의 맹아가 또는 (적어도 '기술적 상상력'으로서는) 그 비전이 준비되었다.

그 의미에서는 우리들은 아직 백 년 전의 상상력의 범위 내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역으로 말하면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인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나 사회 비전이 백 년 후 인 22세기 초두에 인류나 지구, 나아가서는 우주의 상태를 크게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다.

「22세기 그랜드 디자인」이란, 이러한 시점으로부터 백년/천년의 비행거리에 대한 시각이나 가치의 기준을 찾아보고 싶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중략〉...

지구 46억년, 우주 150억년 시간의 풍경 속에서 이 혹성의 생명과 인류의「현재」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들 하나하나의 유전자나 세포가 장대한 시간의 기억을 내포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로서 보이고 있다.

그것은 이 우주 안에서 인간의 미천함을 현저하게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우주의 이력(履歷)을 안고 거대한 인간관,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간존엄'이나 '삶의 의미'를 발견해가는 보조도 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세기에 알맞은 「리터러시(literacy)」(시민의 식견)란 어떤 것일까?

수 천 년에서 수 억 년의 시간을 개인이 자유자재로 스케일링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고, 거대한 생명관을 근거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사회 시스템을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커먼 센스(common sense/ 共通感覺)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竹村眞一, 『22世紀のグランドデザイン』(東京,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01))

다케무라의 주장은 적어도 백년, 혹은 '20-21-22'라는 세 개의 세기를 통찰할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세 인생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삼백년은 거대한 시간의 길이라 할지라도, 150년 정도를 구상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이러한 시간적 구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2023년 특별법의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조성이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완성될 수도 없다. 굳이 '문화중심도시 2.0'을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1세기 초반에 진행되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22세기의 광주-한국-아시아'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는 시대와 민족, 지역에 따라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로 창조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어떤 고정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21세기적 구상

이나 실천을 하나의 완성된 틀로 고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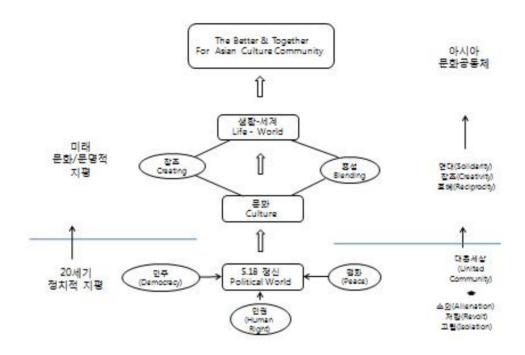
이런 점에서 고민할 문제는 또 있다. 문화와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다. 권역에 따라서 문화와 문명을 크게 구분하지 않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독일 어에서 문명(Zivilisation)은 인류 전체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가치와 본질을 의미 하고, 문화(Kultur)는 민족 간의 차이와 집단적 특징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문명은 전방위적인 것으로 물질, 기술, 제도, 종교, 철학 등을 포 함하고 정신적 형태로 추상적인 사람의 존재 가치에 관한 것이라면, 문화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종족 집단이 창조한 가치에 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문명이 항 구적 원칙으로 전 인류에 적용되며 전 지구에 퍼져 모두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 고 할 때, 문화는 역사주의적인 것으로 특정한 민족과 종족집단에만 해당되고 시 대의 변천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보편문명에 대항하고 민족문화의 자기진실성을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주가 '아시아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다원적 근대 성에 기초하여 - 서구의 근대성과 다르지만, 이를 간단히 전통-낙후의 범주로 폄 하하는 자세를 불식하고 - 근대가 지닌 불가피성과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각기 다른 전통과 사회적 조건에서 출현했던 다른 모델을 인정하는 자세 를 견지하려는 것이리라 여겨진다.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 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2015년 11월 개관한 ACC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 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 함께 동반성장하고자" 라는 ACC의 입장도 이를 감안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명과 문화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오월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유산-독점적 경제성장-군부독재' 등과 같은 야만적/폭력적 문명에 저항하여 '민주, 평화,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고자 하는 민중항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가 오월과 조성사업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 간격이 '도청 건물/전당'이라는 대칭적 구도를 현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당 및 아시아 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비전이나 방향이 좀 더 새롭게 구상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22세기 및 그 이후까지를 전망하기 위해서도, 오월의 계승과 확산은 '문화' 차원에서 고민될 것이 아니라, '문명'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을 조성사업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다시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도 오히려 이러한 면을 환영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은 이러한 고민을 담은 비전을 상상해본 것이다.1)

아시아 문화전당비전



3. 남은 문제들과 해야 할 일들

2006년에 제정된 '특별법'은 2023년까지의 한시법이기 때문에, 7년 후인 2023년 이후에는 법적 효력을 마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노정된 제반 문제점을 수렴하여 '조성사업 2.0' 프로그램을 재준비하고 여기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7년 후의 정치적 지형을 현재적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망이 불투명하다. 다만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남은 7년 동안 준비할 필요는 있다. 여기에는 내부적-외부적 작업이 존재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전당의 역할과 기능이 완비되어 문화적 폭발력이 '광주-한국-아시아'를 선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면이 지역에 널리 확산되어 '문화광주'의 면모가 확실해져야 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광주의 이러한 문화력(文化力)이 한국의 문화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

¹⁾ 이 그림은 본인 외 몇몇 분의 의견이 결집되어 만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지 만 공동작업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도출했다.

면서 아시아문화와 교류-혼성/융합-창조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된다하더라도 명분과 실리를 구축했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 전당과 전당의 인력을 감안할 경우 향후 7년 안에 이러한 명분과실리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마찬가지로 향후 7년 안에 전당이 자립적 능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 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전당의 운영구조는 법인화 형태로 되어 있다. 문화부 산하의 제 기관들은 '위탁, 법인화, 직접 운영' 등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당에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 것인가는 – 이제 이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7년의 성과가 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전당의 휴먼 웨어도 새로운 관점과 미래의 프로그램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 '문화부-광주시-시민'들의 협치(거버넌스)가 보다 확실히 구축되어야한다. 지난 시간 동안 드러난 불협화음의 원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하는형태의 리더쉽을 각각의 조직이 발휘해야 한다.

또다른 국책사업인 '새만금 프로젝트'를 거울삼아 들여다 보면, 1987 대선 공약-1988 기본계획-1991 착공-1994 전북도의 이의 제기(복합산업단지 조성요구) -1996 환경단체의 백지화 요구/중단-2001 재개-2003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2003 서울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06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부 측 승소, 사업 재개-2006년 방조제 물막이공사 완공-2007 토지개발계획 수립-2010.4.27. 준공-2012.11.22. '새만금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새만금개발청 신설: 6개 부처가 관련, 특별회계,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과정을 거쳐왔다. 이 특별법은 가장 최근인 2016.12.27. 개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

'새만금'과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유사성과 차이성이 존재한다. 이 점을 우리는 섬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 광주적 행보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과오를 묵과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조성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월/전당'의 갈등구도에 대한 책임도 내/외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고 올바르게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빛의 숲'이 될 것이라는 '전당'은 아직은 '어둠의 숲'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것이 '빛'을 발하기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 인력,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추상적인 수사에 만족해서도 안 되지만, 기존의위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세속적인 이익 경쟁에 매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않다.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호남과 광주의 가치를 살리면서 지역정치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지향하는 정책 생산과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어야한다. 모든 이슈가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속도와 너비'가무너진 시대에, 지방이 정부를 리드하는 정책 생산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위치는 지역이나 콘텐츠는 중앙과 전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나아가서 지역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중장기적 형세판단에서 최소 30년이상 지속되는 집권 플랜을 구상하는 자세로 나아가야한다. 이 자세의 견지에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가 완성되어 갈 것이다.

발표문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의 도래

이 병 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의 도래

이 병 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동남을구 지역위원장)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대와 죄절, 그리고 새로운 기회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공약으로 시작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이 사업에 대한 왜곡, 사업축소로 인해 그동안 절름발이 추진 상황을 보였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개관했으나 조직과 예산의 축소로인해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고, 7대문화권사업, 문화콘텐츠산업육성 등 주요사업들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도심 공동화와 청년실업률은 계속 증가하여 전국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 전당 조직축소, 예산삭감 / 필요인원 600명/ 현재인원 150명, 예산의 삭감/ `15년 807억/`17년 484 억으로 감액되었다가 창조혁신센터의 법적조치 이후 소액 증액
- ※ 전남도청의 이전(2006) 이후 도시공동화 심화(전국최고의 공실률/ 18.2%)
- ※ 2016년 취업율 8.4% 하락, 전국평균 1.1% 상승

광주는 문화를 통한 도시의 재생과 아울러 산업구조의 재편을 시도한 전국 최초의 모델도시로서, 이는 노무현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관 계에 놓여있었다. 과학기술·예술문화·인문의 융·복합을 통해 영국의 창의산업 과 같은 새로운 산업구조의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 보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 시 조성사업을 그 전초적 국책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이명박정부 때 기구축소와 더불어 박근혜정부에 들어 '창조경제'라는 국정운영방향과 맞물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과학 기술과 예술, 인문 등 다양한 지식의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기본 개념과 매우 닮아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외면되어왔으며 축소되었다.

예술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된'창조경제'의 중추적 기관은'창조혁신센터'였는데, 이 기관은 국정농단의 핵심기관으로서 비리와 부패의 중심이 되어왔다.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주요 기관 및 예산 / 창조혁신센터, 전국에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56개의 무한상상실 등을 운영(대부분 휴업상태). 예산은 2014년/71억원, 2015년/ 119억원, 2016년/ 903억원, 2017년/ 1,278억원에서 1,870억원으로 확대 배정

이런 과정에서 2014년 아시아문화전당 건축물만 완공했고 2015년 민주평화교류원을 제외한 시설들이 겨우 개관했으나 그나마도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R&D, 콘텐츠 창·제작, 아카데미, 아시아문화교류 등 대부분의 기능이정지된 상태에 놓여있다.

또한 도시의 문화산업 관련분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던 2007년에 비해 오히려 약 30%가 줄어드는(당초 전국의 1.4%, 이후 1.0%로 추락) 현상이 벌어졌다. 문화중심도시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도시 최하위 수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광주의 문화콘텐츠산업 현황

- 광주의 문화산업 규모(2013년 기준) ※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 매출액은 광주 <u>8,662억원(1.0%)</u> / 전국 910조 912억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시작시점인 2007년에는 1.4%
 -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 수는 광주 3,701개(3.4%) /전국 108,562개
 - 관련업계 종사자수는 12.059명(2.1%) / 전국 572.735명
 - 사업체수는 2012년 3,899개소에서 2013년 3,683개로 전년대비 5.5% 감소
- 전국 주요도시와 비교
 - 광주의 전국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의 수준인 1.0%
 - 전국 6개 광역시 중 매출액 최하위
 - 사업체 수는 연평균 5.5% 감소
 -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12,509명으로 전체 574,736명의 약 2.1%를 차지

박근혜정부의 이런 편파적이며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의 하야를 불러왔고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로운 정부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문재인후보에 대한 광주의 전폭적인 지지의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이런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정부로부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일어서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샘이다. 문재인정부는 대선기간 동안 선거공약으로 그런 시대적요청과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제시했고, 이제 그에 대한 대비로서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수립해야 하는 시점이다.

○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시아문화전당 주요 기능은 아직 시작되지도 못했고 시작한 것은 정지된 상태

2014년 전당 건축물의 완공 후 수차례의 개관 연기가 있은 끝에 2015년 11월 25일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당의 개관이 불러온 파장은 미미했다. 전당 내 주요 개관 콘텐츠들은 2013년부터 지속되어온 전당법인화 시도와 실패, 조직 갈등, 아시아문화개발원의 해산 등의 문제로 인해 부실하거나 급조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전당 내에서 자체적 기획에 의해 생산된 것은 아예 없었다. 전당의 주요 기능들, 연구-창조교육-교류 등의 기능들은 이미 개관단계에서 철저하게 외면되었고, 그동안국제적 교류를 통해 구축해왔던 계획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에 이뤄진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조직개편과 예술감독의 해임 등으로 인해 원천무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기능 중 콘텐츠 창·제작 기능은 정지상태에 있다가 최근 몇 개월 동안 창제작센터가 랩의 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이제야 시험가 동 단계에 들어섰고, 인력양성을 담당할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아시아문화의 연구 및 자원수집과 민주평화교류원의 교류 기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는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생 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그와 관련된 도시 내 다양한 창조생태계 조성은 요원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의 단절

아시아문화전당은 콘텐츠의 연구·기획 및 창제작, 문화프로그램의 개발, 인력양성을 통해 전당의 연구결과물을 도시전체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연구-제작-자원화-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당은 현재 도시가 가진 관련 기관들과 연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일부 개최키로 했으나 이는 단순히 장소의 대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당은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성과물을 제시하고 그 결과 물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들이 도시 내에 드러나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도시 와 연계하여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전당의 운영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간여하지 않고 있으 며 간여할 수도 없다. 최근 광주시와 MOU를 통해 지난 4월 시작하여 오는 12월까지 5·18민주광장과 전당에서 진행되는 프린지페스티벌을 개최한 것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의 본래 취지와는 매우 동떨어진 상황이다. 전당은 도시와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핵심사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연구, 창조 기능의 정지

전당은 자체의 창조적 활동 과정이 도시전체로 확산되면서 산업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생태계 구축이 핵심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당의 창조기능은 거의 정지상태에 있으며, 이를 위한 활동이 거의 중단되어 있음으로써 전당 운영의 핵심목적에 해당하는 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 전당 창제작센터를 중심으로 창작랩과 방문창작자 랩 등이 가동되기 시작했으나, 가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충분하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인력 태부족

전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인력의 절대부족에 있다. 국가로부터 허가된 전당 인력은 50명인데 그나마 전문인력은 16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행정인력이다. 문화원은 정원 96명으로 이뤄져 있는데, 특별법상 문화원의 첫째 기능은 콘텐츠 연구 및 창·제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인력은 관리·회계·행정에 집중되어 있다. 콘텐츠 창·제작에 투여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원은 임시 계약직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 아시아문화원은 최대의 비정규직 양산 조직이 되고 있다. 아시아문화원은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한지 2년이 지나면'무기계약'으로 전환할수밖에 없다는 물을 피하기 위해 그 기간이 차기 전에 대부분의 계약직 직원을 '계약만료'라는 명분으로 해고한다. 최근에도 70여명의 계약직 직원이 6월말을 기점으로 해고되므로 현재 그들을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모집 중에 있다. 따라서 전당의 연구 및 창·제작 관련 업무는 적어도 3~6개월 이상의운영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미 2013년 아시아문화개발원 때부터 진행되어온 현상이다.

여기에서 계약직 인원의 인건비는 콘텐츠 제작비로 충당된다. 국가가 인정한 직원 이외의 인력은 국가로부터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콘텐츠 제작비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인력의 부족은 연구, 창·제작 기능을 저하시키고

한편으로는 콘텐츠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전 정부의 외면, 예산의 부족, 광주시의 전략부재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의 작성과단계별 실시계획에 대해 매우 미온적이다. 그런 가운데 문화도시조성은 오히려 국토부의 도심재생 예산을 각 구청에서 받아내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광주시보다 각 구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동구, 남구, 광산구 등 국토부 예산을 수령해 각각 2년 동안 100~200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조성은 지역의 아이덴티티 설정, 도시구조의 재편, 관광벨트화, 중복요소의 탈피, 우선순위의 설정 등 통합적 구조에서의 전략설정이 필요한데 현재 각 구청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중구난방으로 산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문제이다. 도심재생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광주시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결과적으로 당초 기대했던 성과는 없고 사업 방향의 개선을 위한 대안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보니 최근 국토부는 문화적 도심재생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수정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소방 도로 개설,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도시 인프라 구조개선으로 사업을 집중할 예정에 있는 것이다.

유명무실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급의 위원장과 16개 부처의 장관, 16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우 영향력 있는 조직이었다. 당초 각 부처의 장관들이 이 회의에 참여하는 이유는 국책사업으로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이 국가 각 부처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즉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관리운영은 문화부가 맡되 산자부, 미래부, 국토부, 교 육부 등 관련 부처가 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현재 각 부처의 장관은 이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또 조성위원회도 1년에 1~2회 열리는 것이 고작이다. 회의 내용도 매우 단순한 보고 수준에 서 마무리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축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당초 1단 2국 8팀에서 1과로 줄어든 원인은 광주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전 정부의 의지가 희박했다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일 것이다. 거기에 아시아문화전당으로 대부분의 추진단 내 연구인력이 옮겨갔고 극히 일부의 직원들만 도시조성에 남게 되었다. 즉 전당인력을 추진단 직원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광주시는 그동안 매우 미온적 반응을 보였고, 문화도시조성위원회 등 관련 조직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광주시의 문화산업정책 부재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문화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반영요구, 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구호성 발표 등 수많은 비전을 제시해온 것이 사실일 것이다. 문제는 그에 대한 실행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차원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사실 상 문화산업을 국비에만 의지하고 있었으며, 국비가 배정되지 않으므로 아무 것도 실행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펴왔다.

정부예산은 상당부분 지방비의 대응투자를 전제로 이뤄진다. 따라서 지방 정부가 예산사용에 대한 로드맵, 구체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하여 제시하고 그에 대한 국비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경우 선행요건이므로 반드시 우선 실시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CGI센터 주변에 대한 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첨단융합콘텐츠 퓨처랩 조성) 계획이 있으나 계획에만 그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2017년 국 비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추경예산에서 반영하겠다"라고 강변하고 있다.

현재 구도심 내 3군데에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암산단 내 CGI센터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없다. 서두에 밝혔거니와 광주시의 문화산업 현황은 2007년 당초 전국 1.4%의 점유율에서 1.0%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당초에도 꼴찌, 현재에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 대도시 최악의 상황이다.

문화도시 내 활동인력 부족

아시아문화전당뿐만 아니라 도시 내 문화콘텐츠 관련 인력, 커뮤니티 활동

인력 등 모든 부분에서 인력은 태부족이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인력을 투여할 수 있는 항시적인 일자리 및 업무의 개발이 없기 때문에 인력이 있음에도 필요할 때 요소요소에 투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있어서 인력의 활용과 인력양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탓이다. 다시 말해 인력을 사용할 사업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으로부터 시작된다.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나 방송물 제작 등이 가능하려면 주로 작은 단위에서 이뤄지는 창조생태계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반적인 산업구조의 중요한 토양이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성공한 도시들은 소수 단위로 이뤄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매우 풍부하며, 이들의 활동과 함께 창·제작의 활동을 강화하는 액셀러레이터들의 활동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다.

○ 2.0시대의 방향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나 실제적으로 별로 추진된 것이 없는 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다. 당초 노무현정부에 의해 시작한 사업은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여러번 좌초의 위기를 넘겼고이제 천만 다행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2.0'시대라고 별칭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의 임무를 갖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미션을 요구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전래없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8년부터 가속화되는 생산인구의 감소, 베이비부머로 불리는 주요 소비세대의 후퇴, 소비의 감소가 불러올 장기 침체와 경제적 위험성이상존해 있는 것이다. 또한 극에 달한 청년실업, 세계 최고의 노령화 국가가 눈앞에 와있다.

그런 와중에 산업사회는 기계기술의 혁신을 넘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ICT의 기술발달, 네트워크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산업패턴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처에서 노동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세계일자리 20억 개가 사라진다"는 말은 결코 허언이 아니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전제로 이뤄진다. 4

차산업혁명의 대안으로서 학계나 주요 미래기술 예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대안은 '창의성과 문화'에 있다. 기계가 수용할 수 없는 문화관련 창 의 콘텐츠의 제작, 유통, 소비는 그래서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이다.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광주는 그에 대한 모델도시로서 반드시 성공모 델을 제시해야 하는 임무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광주는 대한민국에 그 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내놓아야 할 시험대에 놓인 상태"라고 현상황을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

문재인정부의 광주 공약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련된 첫 번째 공약은 전당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콘텐츠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전당 내 '예술·기술융합센터'를 조성하여 예술과 ICT에 기반 한 한국 창의산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제2의 개관이 이뤄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의 확대, 전당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문재인정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광주 공약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사업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 '문화콘텐츠밸리' 조성이 포함된다. 7대문화권 사업은 그동안 무성한 연차별실시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사업으로 추진된 것은 거의 없다. 이 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도심재생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로드 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수립된 송암산단의 문화콘텐츠산업클러스터는 일부 콘텐츠의 연구와 제작에는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도시전체의 산업구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도심재생과도 상당히 동떨어져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시아문화전당 역할의 확장

전당은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주요 시설들의 역할 활성화에 따라 아시아적 다양성과 범용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킬러콘텐츠 개발** 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창조원의 창제작센터는 **4 차산업혁명에 대비한 핵심 기관**으로서 다양한 콘텐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할 전 초기지로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연구기술분야**를 설정 할 필요가 있는데, 컴퓨팅, 로보틱스, AR-VR 등 차세대 영상, 드론, 3D프린팅, 아두 이노, 스마트팜, 전자음원, 빅데이터 등으로 확대하여 단순히 예술창작물 제작을 뛰어 넘어야 한다.

또 창조생태계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도시와의 연계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인력 양성 활성화 차원에서 **인력양성을 위한 다중 주체(연구소, 대학, 관련기업, 관련단체 등)의 참여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전당 내 도시를 연구하는 '시티랩'의 구축 및 공동참여 연구

문화도시조성 방안에 대한 총체적 연구를 위해 전당 내에 각 분야가 참여하는 '시티랩'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화적 도시재생연구의 중요한 활동 플랫폼으로서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공동체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 모티베이션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각 종 도시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연구, 공공요소에 대한 문화적 연구뿐만 아니라 4차산업 대비 각종 프로젝트 개발 등 전략적 대응방안까지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구성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실시계획 등 문화도시계획을 일부 용역수행단체에 의뢰하여 진행함으로써 매우 소극적인 주민참여와 극히 일 부 학자들의 연구에 의지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는 도시전체의 컨센 서스를 이끌어내기 힘들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많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 성마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운영예산은 전당이 부담하되 연구의 방향설정이나 연구과제 설정, 연구 실행 등은 국가·지방정부·학계·문화계·관련연구소 등 다중이 참여하여 결정 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이뤄짐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총체적 조직개편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은 적은 인원을 갖고 거대한 시설을 운영하

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인원배분 및 배치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전당과 문화원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국제간 교류, 아시아문화연구, 시설관리 등은 공무원조직인 전당이 맡고 창·제작, 인력양성, 어린이문화원 관련 업무는 법인 조직인 아시아문화원이 맡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이 두 조직의 통합적 관리는 아시아문화전당장이 진행토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또한 **전당장의 지위를 당초대로 정무직으로 승격**하여 국책사업을 이끌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문화원 조직은 5개원 체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전시·창제작·공연·교육·고객관리·인사·회계 등의 기능별로 팀을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제이다. 적은 수로 전체 시설을 관리 운영하려다보니 궁여지책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직형태라고 판단되나 향후 인력의 확충을 대비하여 본래의 5개원 체제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아직 시작도 못한 중요 사업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초의 방향대로 5개원 체재가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위상 회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현재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내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추진단'이란 명칭으로 존재한다. 단장은 4급(서기관급)이다. 당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단2국8팀이었는데,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1단1국6과로 줄어들고 박근혜정부 때는 1단5과로 줄어들었다. 당초의 추진단 조직에서 아시 아문화전당 기획 및 건설, 국제교류 기능을 담당한 과는 제외하고 도시조성과 문 화산업 등에 해당하는 직직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즉 1국(문화도시국) 3과~4 과(문화도시조성과, 문화산업과, 연구개발과, 기획운영과 등) 정도를 유지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현재 추진단은 문화콘텐츠산업실에 소속되어 있는데 추진단을 1국 4과로 편성하여 아시아문화전당장 산하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도시와 전당이 분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시적인 연구체계를 전당내에서 가동시킬 수있는 이점이 있다. 즉 도시와 전당의 연계기능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이다.

7대문화권사업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기구 구축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관련하여 많은 공약 요구가 있었다. 그 중에는 관광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한 내용과 미디어산업 활성 화,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요구들은 사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어느 것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들일 것이다. 문제는 한정된 재정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를 시민차원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거버넌스 구조의 의사결정구조이다. 문화도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논의를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현재 '문화도시협의회'를 구축하여 정책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그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연구따로, 논의따로, 결정따로라는 것도 문제다.

좋은 정책과 사업계획의 결정, 문제에 대한 파악과 해결 등은 좋은 조직구조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를 재구성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

_	30	_

토 론 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문화전당 정상화 해법 <법과 제도, 조직 정상화 방안>

황 병 하 (조선대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교수)

-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25일 개관하였다. 전당 개관의 근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종합계획>(2005년 8월)과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었다. 아특법은 2005년 12월 공표되었지만,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낳았으며, 여전히 광주의 핫이슈로 존재하고 있다. 아특법은 2026년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이는 아특법의 시한이 만료되면 전당 조직의 근거 조항도 동시에 시한이만료되며 아시아문화전당 자체도 한시적 기관과 조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을의미한다. 아특법은 기본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규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법 개정과 연장을 통해 2026년도 이후에도 아특법의 효력이 연장되도록해야 한다.
- 2. 전당의 특수법인화로 인한 문제점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확보 문제이다. 당장 2026년까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지만, 이후 어떤 예산 으로 전당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전당도 자체 수익 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당 자체의 수익만으로 전당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더욱이 광 주광역시가 전당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고, 광주 시민의 세 금 부담률 상승도 큰 문제이다. 결국 전당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아특법의 개정과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어떻게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3. 문화전당 조직은 2015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전당 개관 전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조성과 건립과 운영의 책임을 맡았지만, 개관 후에는 추진단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설립되어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전당 내에는 별도 법인아시아문화원이 설립되었다. 전당 개관 이후 전당 조직체계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 왔다. 전당장은 2016년 세 차례의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되었다. 전당장의 부재와 직무대행 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총괄 운영과 인력 충원, 그리고 문화콘텐츠 개발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이는 이전 정권의 문화전당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지를 의미하였다. 아시아문화원 조직체계의 불안한 모습도 지역사회가원하는 전당의 합리적 모습과 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직의 안정화는 전당 및 문화원의 창의성, 자율성, 책임성, 능동성 확대와직결된다. 전당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광주 문화 활성화에 남긴 상처는 너무크다.

- 4. 전당의 법인화 작업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전당 조직은 안정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갈등, 반목, 해산, 해임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아시아문화 개발원의 집단 해임 사태가 불과 2년 전의 사건이었는데, 2017년 현재 제2차 해임 사태가 전당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 전당 조직의 불안정은 문화콘텐츠 개발의 부실과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의 대상과 타깃이 되었던 전당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농단의 대상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지금 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규 직원 및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해임 사태는 중단되어야한다.
- 5. 전당의 설립 목적, 역할과 기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다. 전당은 민주, 인권, 평화라는 모토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의 교류, 교육,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당이 지금까지 그목적과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전당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결코 개인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전당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래의 설립목적과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부 요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보다 내부 요인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당 건립과정의 갈등과 반목, 정치적 여건의 어려움, 이전 정부의적폐와 실정 등 과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면 빠르게 지나가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고찰은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며, 미래의 목표에 대

한 신뢰감은 소통과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전당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 내부적 성찰뿐만 아니라 지역 거버넌스 기구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의 핵심은 미래의 광주 문화도시에 대한 변화, 창의, 비전 제시이다. 미래의 변화는 과거나 현재와는 달라야 하고 차별화되어야 한다. 광주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변화와 창의가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만, 광주의 문화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집단적으로 고민을 해야할 필요성은 있다. 집단적 고민은 대립과 반목이 아니라 융합과 화합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은 광주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특정화 및 폐쇄화가 아니라 대중화 및 보편화시켜야 하며,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광주, 그리고 미래 광주 시민들의 활기차고 생동적인 삶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

김 기 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지나온 13년, 남은 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진행된다. 전체 20년 중에서 절반을 훌쩍 경과했고 남은 시간은 7년 정도이다. 이에 비해 2015년까지 조성사업의 국고 총투자 집행액은 10,489억 원 정도로, 계획(총 5.3 조원=국비 2.8, 지방비 0.8, 민자 1.7) 대비 37.9%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문화전 당 건립(6,846억 원)과 운영(2,282억 원)에 사용되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로드맵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성사업은 '성숙단계'에 진입해 문화전당 운영이 활성화되고, 7대문화권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전당측은 2017~2019년까지를 '시스템 구축·성장단계'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 문화전당의 조직과 운영 상황, 조성사업의 진척 정도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성숙'과 '성장' 단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남아 있는 7년이 더욱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왜곡, 사업 축소...'체제의 공간'

발표자 이병훈 위원장은 "조성 사업은 정부의 외면, 예산의 부족, 광주시의 전략 부재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문화전당은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R&D, 콘텐츠 창·제작, 아카데미, 아시아문화교류 등 대부분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본다. 이와 같은 상황진단은 김하림 교수의 "아시문화중심도시는 과연 조성될 수있는가"라는 의문 섞인 질문을 가능케 한다. 정확한 진단이자 합리적인 의심이라생각된다.

조성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고, 사업 축소로 비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왔다. 문화전당은 총괄 책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행정자치부가 정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도 없었다. 개관 이후 문화전당은 문화창조의 공간이라기보다는 국가권력의 질서가 관철되는 '체제의 공간'이었다.

협치, 혁신, 분권, 자치, 5·18정신...

새 정부 들어서 조성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가 내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가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2.0시 대의 핵심은 지난 양대 정부 아래서 왜곡되고 축소되어 지지부진한 조성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정상화는 조성사업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회복하고, 변화된 문화지형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과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0시대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시대정신 및 국정운영 기조, 문화정책의 패러다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조성사업 추진과 문화전당 운영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와 주요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협치이다.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해 개방성을 높여서 문화기관, 집단, 개인들 사이의 협력망을 넓혀가는 것이다. 협치는 문제를 풀어가 는 새로운 방식이자 과정이다.

둘째, 혁신이다. 국가와 지역이 직면한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4차산업혁명 등의 사회문제를 문화를 통해 창의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혁신은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이다.

셋째, 분권과 자치이다. 문화전당의 운영과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책임 있는 역할과 자기결정 권한을 높여가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는 민주주의의 강화이다.

넷째, 5·18정신이다. 5·18정신인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실행원리로 재활성화하여 '신인본주의'를 추동시켜내는 것이다. 5·18정신은 조성사업의 기본 이념의 복원이다.

문화와 도시의 결합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현실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는 두 분의 발표자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문화전당의 기능 회복, 전당과 도시의 연결'(이병훈), '전당과 7대문화권의 연계와 활성화'(김하림)이다. 부연하자면, 앞으로 조성사업은 문화전당 조직, 인력, 운영 등의 안정화를 통해 기능의 활성화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 축으로는 7대문화권 사업 등을 중심으로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조성사업 내부에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었던 문화예술 위주의 장르 중심적 사고를 벗어낼 필요가 있다. 문화전당의 운영을 안정화시켜 전당에서 생산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효과가 도시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문화와 도시가 긴밀하게 결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도시문화, 도시문제, 도시경제, 도시재생, 도시계획 등이 조성사업의 내부로적극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곧 문체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부처 간 협치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광주 속의 비광주'...분권협약, 지역 콘텐츠

문화전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과 운영,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의 목적과 핵심전략에 대한 수정, 사업의 재정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2023)'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민주평화교류원의 개원이다. 민주평화교류원은 조성사업과 문화전당의 이념을 지탱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는 핵심기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전당을 둘러싼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 사이의 비대칭적인 간극을 좁히고, 5·18공간의 원형보존과 5·18의 문화예술적 확장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시간을 경과한 역사적 기억과 공간의 100% 복원이란 불가능의 영역이다. 문화적 재현이 사실적 재현보다 훨씬 강렬한 의미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때론예술이 도시의 혼을 대표한다. 현재의 의미 충돌 상황을 고려하면 광주시가 합리적인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광주 속의 비광주' 상황에 처해 있는 문화전당에 대한 지역의 '개입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전당 운영에서 협치와 분권의 실행이다. 새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분 권과 자치를 말하는 상황에서 조성사업이나 문화전당의 운영도 지역의 참여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느슨한 네트워크 방식 의 협력들을 넘어서 주체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역할을 명시한 제도적 수준의 협력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의 일각에서 제안한 '문화전당 운영협의회'가 시작 지 점이 될 수 있다. 새 정부 아래서는 지역으로의 문화재정의 분산과 문화행정 권 한의 이양, 그리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분권이 강 조될 것이다. 문화분권의 원리를 문화전당의 운영을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정책 사안이나 사업에 따라 현실적이고 실 행력 있는 분야별 분권협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콘텐츠 생산에서 '아시아' 강박을 벗어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수급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한국-> 광주로 이어지는 하향적 접근이 아니라, 광주에 비중을 두고 지역으로부터 생산되는 콘텐츠가 문화전당 내부에서 수용되고 가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문화전당의 실질적 토대를 다지는 길이다. 문화도시는 지역적 특성과 역량에 기반할 때만이 지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적 스케일을 지향하되 광주와전남을 아우르는 지역적 콘텐츠의 창조와 수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시

아문화원의 연구 영역은 광주학, 남도학, 호남학 등 지역학 주제나 대상으로 넓혀져야 한다.

문화적 도시환경을 위한 7대문화권의 재구성

김하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전당을 제외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이고, 이 부분의 핵심은 '7대문화권 조성'이다. 문화전당 개관 이후 에도 7대문화권 사업은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아시아 문화도시 조성 종합계획에만 담겨진 7대문화권 사업을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자 한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7대문화권 계획의 현실성과 수용 력을 높이기 위한 '7대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를 진행 중이다. 7대문화권 조성사 업은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영역을 '7개문화권 조성'과 '문화도시 기반 조성' 분야로 구분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7대문화권 조성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과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고 한 세트로 인식되고 있다. 양자 간의차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전당-문화권-문화거점 사이의 교류와 순환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그려 나가야 한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단위 문화거점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역량을 키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7대문화권 수정계획 연구는 사업의 변경뿐만 아니라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7대문화권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단지 계획과 사업의 '비현실성'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추진 주체들의 책임성과 의지의 부족이 더욱 크게 작용한 탓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계획 상의 사업내용, 추진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 추진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수정계획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지리적·공간적 단위를 중심으로 구획된 7대문화권의 범위를 유연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변화된 문화기술 및 환경, 도시계획상 새롭게 부상한 문화공간, 미래세대의 문화욕구, 도시가 직면할 사회문화경제적 도전 등을 고려해 유사 개념과 유사 콘텐츠 단위로 7대문화권의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첨단지구 중심의 아시아신과학원은 송암 문화콘텐츠밸리지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에 기반한 혁신적·융합적 접근을 통해 사업이 재설계되어야 한다.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단지 문화인프라만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일 수 없다. 도시문화 형성, 도시문제 해결, 도시의 문화적 역량 축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최근 논의되는 문화도시 성장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원적·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의 효과와전략, 도시재생, 공유경제, 미래교육, 세대 연대 등의 관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 지속 과정으로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 종료된다. 새 정부의 공약이 성사되어 5년 연장된 2028년 까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10년 남짓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거대 프로젝트로 종료되는 완결형의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장기 지속성을 갖는 지난한 문화적 과정이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지속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국가 지원 이후의 장기 지속을 감당해 낼 지역차원의 역량 축적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광주시의 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정부의 예산 투입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먼저 주도해 나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아시아문화전당, CT 연구원의 활성화, 그리고 광주문화산업의 육성

주 정 민 (전남대 교수)

1. 아시아문화 전당의 활성화

가.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지체요인

○ 전당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사항

-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문화전당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부족, 콘텐츠 확보 및 예산 투입지체, 전당의 정체성 확보 부족, 전당의 대중성 확보 부족 등의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아시아문화전당의 거버넌스의 체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당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
- 발제자의 지적처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유명무실화, 전당장의 공석, 광주시와 문화체육부간의 전당운영을 둘러싼 협치 구조의 미형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콘텐츠 확보 및 예산투입의 지체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 제작 및 개발 등을 위해 효과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함. 이 때문에 원래 목표로 했던 콘텐츠의 개발과 투자가 이뤄지지 못함.

○ 정체성 확보,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전당이 지향하는 '세계를 향한 아시아의 창'이리는 컨셉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 전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축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전당의 기능과 역할,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화게 잡히지 않고 있음.
- 전당의 정체성은 전당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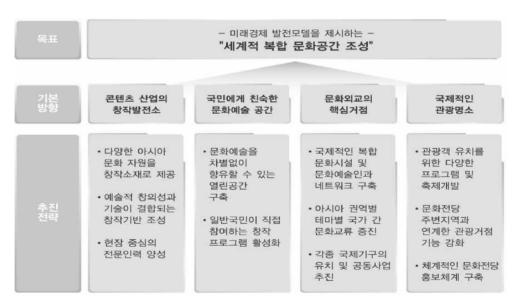
할 수 있음.

※ 전당이 개관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당이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계속 논의해야 하는 것이 현재 아시아 문화 전당의 위상이고 현실임.

나.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확보 및 구축

○ 목표의 구체화

- 아시아문화전당은 '미래경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복합 문화공 간 조성' 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목표가 추상적이어서 실제 전당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음.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을 실행 필요가 있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55쪽.

○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의 실행

- '콘텐츠 산업의 창작발전소', '국민에게 친숙한 문화예술 공간', '문화외교의 핵심 거점', '국제적인 관광명소' 등의 기본 방향 및 그에 따른 추진전략은 분명하나, 실제 그동안 이러한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필요함.

○ 전당 콘텐츠의 성격과 정체성 확보

- 전당의 핵심은 전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콘텐츠의 성격에 달려있다고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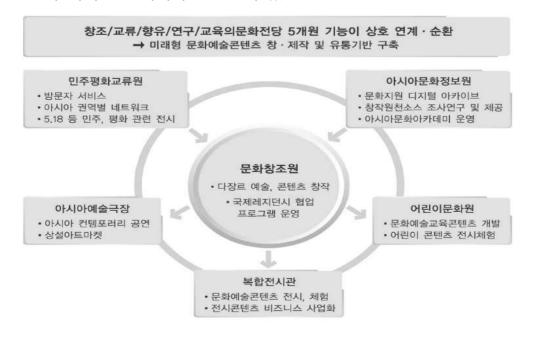
과언이 아님.

- 전당 콘텐츠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향유자(소극적 소비자)측면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창·제작자(적극적 소비자 또는 생산자)측면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승권, 2015).
- 향유자 측면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를 접근할 경우, 문화·예술 계의 오랜 논쟁 중의 하나인 예술성과 대중성의 문제로 귀결됨. 예술성과 대중성은 동전의 양면과 비슥해 상호 장단점을 갖고 있음.
- 현재 전당의 콘텐츠는 지나치게 예술성에 치중하고 있어, 대중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이는 전당 방문자의 수를 제한해 전당 활성화에 걸림 돌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예술성과 함께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다.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 방향

○ 5개원 13개 센터의 유기적인 연계 및 연계 및 순환 체계 확립

- 전당의 운영체계는 민주평화교류원과 아시아문화정보원의 각종 자료와 데이터가 문화창조원의 제작기능을 통해 콘텐츠로 양산되고, 이러한 콘텐츠가 아시아예술극장, 복합전시관, 어린이 문화원으로 환류되는 시스템임. 따라서 이 순환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함.
- 현재는 이러한 5개원 13개 센터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이는 전당의 거버넌스 체제와도 관련이 있음.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82쪽.

○ 시민들과 일반인들의 참여 공간과 활동 활성화

- 아시문화광장, 아시아문화원 옥상광장, 다목적이벤트 마당, 계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행사와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이 참여 연하여 문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

공간구분	주요내용	이미지
아시아 문화광장	 디지털로 환경과 인간의 소통을 구현한 미래지향적 광장 전당의 대표 광장으로 디지털 월(Digital Wall)과 폰드(Pond)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광장 조성 프로그램 사례 디지털 네트워크 퍼포먼스 	A A A A
아시아 문화원 옥상광장	 아시아문화를 은유적, 공감각적 형태로 향유하는 길 느티나무 수림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활용 프로그램 사례 보행동선 바닥패널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다목적 이벤트마당, 계단광장	이벤트가 진행되는 다목적 이벤트 마당과 융복합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스테이션 주요 옥외행사가 진행되는 이벤트 마당과 게릴라성 공연 위주의 콘텐츠 스테이션 프로그램 사례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파라솔 축제	

※ 싱가폴의 에스플러네이드 사례

- 평소 예술을 접하기 힘든 시민들에게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교육·행사· 이벤트 등을 다양한 연령대를 상대로 개최해 많은 시민들이 예술에 대 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나라·문화별 축제를 통해 '사회적 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활성화 됨.

※ 프랑스 퐁피두센터 사례

- 퐁피두센터는 야외광장을 거리공연·전시, 꽃시장 등 다양한 예술가와 일반인들의 참여 및 발표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 시낭송회와 미술 강좌, 작품해설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음.

○ 국제적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상 정립과 브랜드 가치 제고

- 전당은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 예술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함. 이를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들의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전당만의 독창성을 가진 국제페스티벌을 열고, 전당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전당의 브랜드 가치를 쌓아야 함.

- 따라서 문화전당 만의 특성을 갖춘 융복합 콘텐츠 기획하고 개발하는 창· 제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7대 문화지구 등 광주전남의 문화자산과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전당 활성화의 관건은 외부 관광개 등 방문객이 확보가 선결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전당뿐만 아니라 전당과 연계한 7대 문화지구의 각종 문화적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전남 등 호남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당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전당이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공연전시를 기획해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등 수익사업 다변화와 부가가치 창출 재정 안정화로 연결시켜야 함.

2. 광주 CT연구원의 활성화

가. 문화콘텐츠 산업과 CT기술의 활용

○ CT의 문화 콘텐츠 분야 적용

- CT는 문화콘텐츠 산업 전 과정(기획, 창·제작, 유통 등)에 활용되거나 관련 서비스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
- CT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콘텐츠 기술은 인터랙션 기술, 디지털 콘텐츠 솔루션 기술, 가상·증강현실 기술, 컴퓨터그래픽 기술, 소셜컴퓨팅 기술, 실감방송 기술 등 최신 콘텐츠 서비스 분야임.
- 문화콘텐츠는 이들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콘텐츠의 부가가 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CT 발전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변화

- CT의 발달로 콘텐츠는 그 속성뿐만 아니라 서비스 형태에서도 변화가 나타 나고 있으며, 산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융복합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현상은 단순히 콘텐츠 산업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기, 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
- 융합은 산업 내 융합(디지털 컨버전스 등)에서 ICT와 타산업, CT(문화기술)와 콘텐츠 산업과의 융합 등 산업 간 융합으로 발전하고 있음.

나. 광주 기반 CT 연구원의 필요성

○ CT 연구원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 문화콘텐츠 산업은 고성장 산업이며, 타산업의 동방성장을 촉진하고, 디지털화 및 미디어 융합의 확장을 추동함. CT 연구원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CT R&D 가동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 문화콘텐츠 산업은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국력의 상징이며, 기술, 예술, 인문 글로벌 인재역량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분야 임. CT 연구원은 융합형 CT 기술의 창출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주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

○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의 당위성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사업 및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성장엔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 아시아문화정보원의 다양한 문화적 지원을 최신의 CT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로 생산하는 구조형성이 필요함.
 - > 호남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과 문화원형을 CT 기술을 활용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음.
 -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콘텐츠관련 기관이 입주하여 국가차원의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추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 한국콘텐츠진흥원 뿐만 아니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등 CT기술을 개발하고 추동하는데 있어, 직접 참여 및 지원 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음.
 - 송암산단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CGI센터가 입주해 있고, 아울러 2020년 까지 최신의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ETRI 등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CT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나, 기존의 출연 연구소 체제에서는 정부의 전략과제 중심의 기술연구에 치중하고 있어, CT의 기본 특성인 문화예술, 디자인, 인문사회, 기술 등의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없는 것이 현실임.

다. CT 연구원 설립 및 추진방안

○ 현 한국문화기술연소의 확대 및 독립화

-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하여 광주과기원(GIST)에 한국문화기술연 구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학교부설 연구소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독립성과 예산확보 등에 한계를 갖고 있음. 따라서 독자적인 성격 의 CT연구원의 설립과 추진이 필요함.
 - > 광주과기원의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모태로 하여 독립적인 CT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예산, 인력, 기술의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 CT 연구원의 활용 및 운용 방안

- CT 연구원은 광주에 설립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육성, 광주 문화 콘텐츠 산업의 추동의 역할과 함께 동시에 국가적인 차원의 CT 기술 연 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보다 인간중심적인 개인 맞춤형의 콘텐츠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선제적인 콘텐츠 개발을 추동하는 기술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적인 차원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 > 최근 콘텐츠산업은 AR, VR, 홀로그램 등의 최신 CT기술의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CT 기술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

3.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가. 광주문화콘텐츠산업 지체의 원인

○ 문화콘텐츠 산업 도시로서 이미지 취약

- 광주는 그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5대 전략콘텐츠 육성 등 문화콘텐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문화콘텐츠 중심도시로서의 이미지 형성에 한계를 갖고 있음.
- 문화콘텐츠 산업 도시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의 실패로 콘텐츠 관련 기업의 유치, 투자의 유치 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음.

○ 대표 전략콘텐츠의 부재

- 광주는 그동안 5 전략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왔지만, 실제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는 애니메이션임.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광주가 애니메이션 중심

- 의 콘텐츠 육성 도시라는 인식은 부족함.
- 5대 전략 콘텐츠에 대해 분산 지원과 육성정책을 통해, 전략적인 대표 콘텐츠를 육성하지 못해, 관련 산업분야 및 종사자들로부터 콘텐츠 산업 육성도시로서의 관심을 받지 못함. 즉, 콘텐츠 산업의 메카로서의 인지도제고에 한계를 갖고 있음.
 - ※ 부산 '영화', 대구 '게임', 부천 '만화', 춘천 '애니메이션'과 같은 대표 장르부재

○ 기업유치, 자본유치의 한계

-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적인 한계, 그리고 기획에서 유통·마케팅까지 의 원스톱서비스 체계 부족 등으로 기업과 자본 유치에 한계를 갖고 있음
 - > 실제로 콘텐츠기업의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와는 관련이 부족한 CGI센터 중심의 휴반작업(Post-Production) 제 작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한계가 존재함.
 - 제작 인력 지원 및 육성 체계 미흡가여 관련기업의 흡입력이 약하고, 현지의 기업도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최근 아시아문화콘텐츠펀드가 출범하는 등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나, 서울 등에 비하여 여전히 투자를 유인할 자본, 컨설팅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지역의 역량집결에 한계

- 광주시의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크지만, 민간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산업 추동 거버넌스 체계 미성숙 되어 있고, 지역사회 콘텐츠 산업 육성의 의견통일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 2015년 광주광역시 산하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출범
- 지역의 문화콘텐츠관련 기관과 시설(대학 등) 연계하여 지역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추동할 활용 방안이 부재한 것이 현실임.

나. 5대전략 콘텐츠의 육성

○ 광주광역시 5대 전략콘텐츠 집중육성 장르 논의

-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5대 전략 콘텐츠를 전략 콘텐츠로 지정하여 육성해 옴.
 - > 5대 전략 콘텐츠 육성에 대해 너무 다양한 장르에 분산되어 있어 역량 집중이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 ※ 광주광역시의 5대 전략콘텐츠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첨단영상 분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등에서 특정장르의 콘텐츠 보다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수요가 존재함.
- 따라서 특정 장르에 집중하기 보다는 5대전략 콘텐츠의 각 분야에서 광 주에서 필요한 세부분야나 기능을 특화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 예를 들어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한 5대전략 콘텐츠 육성 가능

○ 5대 전략 콘텐츠 육성방향

- 1) 첨단영상콘텐츠
 - CGI센터 등을 활용하여 실감콘텐츠 기반의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광고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콘텐츠를 생산과 유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 실감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집중(송암산단에 구축되는 첨단실 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를 활용)

2) 게임콘텐츠

- 기존의 게임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놀이 중심의 체험형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여 모바일 등에 유통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활로를 개척
 - ☞ 놀이 중심의 체험형 게임 콘텐츠 개발에 집중

3) 음악콘텐츠

- 음악콘텐츠의 제작·유통 활성화를 위한 음악타운을 조성하고 음악 공연과 계절별 음악축제가 일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을 통해음악도시로서 위상 정립
 - ☞ 각종 음악축제 등을 활용하여 음악도시로 육성하고, 신규· 전통음악 중심의 음원콘텐츠 산업에 집중(음악창작소, 아시아문화전당 활용)

4) 공예·디자인콘텐츠

- 광산업 등의 전략산업의 신기술을 접목시킨 전통공예상품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화 촉진
 - ☞ 공예제품의 유통창구도시로서 역할 집중
- 광주의 전략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산업디자인과 도시를 문화적으로 조성하는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촉진
 - ☞ 산업디자인의 보완 및 공공디자인의 활성화에 집중(광주디자인센터 활용)

5) 에듀테인먼트콘텐츠

- 실감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놀이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원천 콘텐 츠를 제공하는 방식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 어린이들의 놀이교육 콘텐츠 개발에 집중(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 활용)

다. 송암산단의 문화콘텐츠 산업 밸리 조성

○ 첨단실감콘텐츠제작클러스터 추진

- 2016년부터 기재부 예타사업으로 기존 광주CGI센터의 콘텐츠 제작 후반 작업(Post-Production)시설 기능을 보완하는 사전제작 (Pre-Production) 및 메인제작 (Main-Production) 설비를 구축하고 있음.
- 첨단실감기술기반 창조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업 및 인력 유치 기반 형성, 제작센터를 통해 생산되는 콘텐츠 유통 및 마케팅 지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구 분	세부추진사업	사업연도	소요예산(백만 원)
계		2016-2020	101,288
첨단실감 제작 기반조성	소 계	79,055	
	창조콘텐츠 제작지원센터 건립	2016-2020	47,990
	크리에이티브 콘텐츠플라자 건립	2016-2020	31,065
	소 계	22,233	
성과확산사업	야외 제작스튜디오	2016-2020	7,000
	첨단실감콘텐츠 체험 사업	2016-2020	15,233

<표 1>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세부 추진사업 내용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밸리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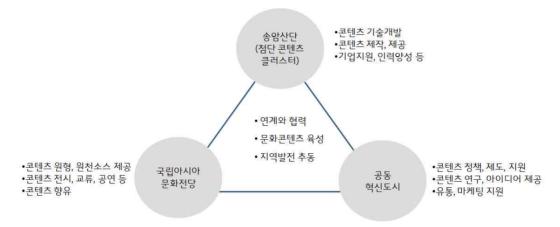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수행을 통해 송암산단을 5대 전략콘텐츠 제작 기지화하는 것이 필요함.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수행을 계기로 송암산단의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구축 가시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밸리' 로 육성함.
- 현재 광주과기원에 위치한 한국콘텐츠기술연구소를 한국콘텐츠기술연구원 (가칭: CT연구원)으로 확대하여 송암산단에 위치하여 집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관련 기술

분야의 지원기능을 CT연구원이 위치한 디지털콘텐츠산업 클러스터 내에서 수행함으로써 5대 전략콘텐츠의 분야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것이 필요함.

○ 아시아문화전당, 송암산단, 나주 공동혁신도시의 문화콘텐츠 삼각축 구축

- 나주 공동혁신도시의 콘텐츠 관련기관의 지원(아이디어 등)을 받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원형을 송암산단의 첨단실감콘텐 츠제작클러스터에서 콘텐츠화 함.
- 완성된 콘텐츠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통해 전시, 교류, 마케팅하고, 아울러 공동혁신도시의 홍보마케팅 창을 통해 전국 및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그림> 5대 전략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3주체 간 연계방안



<그림 4> 3개 주체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 개념도



시민참여와 민관협치에 기반을 둔 조성사업과 전당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통치에서 협치로, 소통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

근래 정부정책의 변화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통치'에서 '협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즉 거버넌스(governance)에 기초한 정책 운용과 결정이다.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사실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 참여의 범위와 책임성, 운용절차, 의사결정방식, 위임절차 등 각론에 들어가면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방식과 강조점에 분명한 차이가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란 정부 주도로 관리 통치하던 시대를 넘어 공식/비공식적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고 의존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력 시스템으로서 성숙한 민주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목적, 주체, 공간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층위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진행돼 왔다. 그로 인해 처음부터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문화도시의 선행조건이자 실천원리로 사회 각계가 한 목소리로 문화 거버넌스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김기곤, 2016; 김하림, 2014; 류재한, 2014).

그러나 문화거버넌스를 운용함에 있어서 개념적, 실천적 차원에 좁히기 힘든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념적으로는 문화 거버넌스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의미와 사회적 합의를 획득하지 못하고 실천적 차원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당성 확보 절차로 축소되거나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구호쯤으로 치부된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 때로는 거버넌스가 정부가 주도해야 할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게 만드는 도피처로 이용됨으로써 거버넌스가 오히려 참여 주체들 간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협치의 역설'이 나타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광주의 문화거버넌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동안 조성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협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사업의 비전과목표가 국가적, 지역적, 시민적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무엇이어야 하는지) 재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거버넌스와 문화도시 조성사업

통상 광주 문화거버넌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 등이 광범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문화도 시와 관련된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참여 주체들의 문화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문화도시가 더욱 창의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적 실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토론문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문화 거버넌스 참여 주체 중 민관 협치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동에 보다 주목해보고자 한다.

사실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거버넌스 장치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거버 넌스를 비롯해 광주시 주도 거버넌스, 시민사회 주도 거버넌스 등이 다양하게 진행돼 왔다. 이 중 시민사회 주도 거버넌스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현안을 발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 민사회를 대표해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것들이다.

가령 '민관합동워크숍'은 광주지역 현안 관련해 민관이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문화도시 관련실천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으로 전환해온 전문가 중심의 민관거버넌스다. 김하림 교수가 강조한 것처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정부주도로 갑자기 출현한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부의 발전 동력과 국책사업이 접합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주장도 바로 이와 같은 민간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 본다.

다음으로 2007년 대학 내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포럼단체 등 총 21개 지역 단체가 참여한 범시민적 협의체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있다. 협의회는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발표 이후 종합계획 확정을 앞두고 시민적 합의를 도 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출범 취지문을 통해 조성사업에서 국가-지역-시 민사회가 갈등하는 국면에서 조정자 역할이나 주요 이슈에 대해 공론화 역할 을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갈등 국면이 발생했을 경우 '연석회의' 이름으로 문화거버 넌스가 운영되기도 했다(김기곤, 2016). 이를테면 '도청별관문제해법을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처럼 도청별관 원형보존과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 화되자 시민사회가 이들을 조정하기 위해 조직한 민관거버넌스였다. 이밖에 '광주문화중심도시 성공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바람직한 아특법 개정을 위한 범시민연석회의' 등도 구성돼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했다.

3. 문화거버넌스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

지향해야 할 목표와 해결과제, 문화적 환경, 주체들의 상황 등 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문화거버넌스가 당초 취지대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성을 공유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버넌스가 갈등을 방치하거나장기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거버넌스란 애초부터 다양한 참여주체들 간의 상호영향력이 존중되고 정부는 매개자 또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론적으로 수평적인 권력관계를 갖는다. 문제는 이 경우 정책입안과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누가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가 골치 아픈 갈등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거버넌스를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이나 정책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회피해버리는 도구로 이용할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도청별관 원형보존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5.18 최후 항전지 옛 도청원형보존'관련 담론도 앞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이 경우 시민사회는 문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역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책임성의 한계와 관련한 협치의 역설은 시민사회(단체)에도 동일한 질문을 제기한다. 과연 시민사회(단체)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그에 합당한 역량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 사안별 대응을 넘어 안정적인 협력 거버넌스로 활동할 내부 역량을 갖추었는가?

상호의존과 협력, 신뢰와 일관성, 책임의식, 자원과 권한의 분배는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과 시민단체 등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거버넌스의 성공적 구축과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가 시민과의 거버넌스 조직틀 구축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거버넌스의 참여주체로서 체가 있었지만, 이는 거버넌스가 협치를 강조하면서 과거의 공무원이 하던 역할을 소수의 전문가가 대체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유사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문화거버넌스의 참여주체로 과연 개개의 광주시민이 누리는 문화 향유권을 고려했는지, 시민이 원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나 문화전당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교한 거버넌스 틀이 확보됐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위한 지역/정부 협력방안과 대선공약 실천방안

김 석 웅 (광주광역시 문화도시정책관)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협력체계

- □ 문화전당 정례협의회
 - (운영기간) '14. 11~ * **광주·전남·문화전당 협업체**
 - (참여기관)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광주시, 전남도 등(4개 기관)
 - O (운영내용)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모색 (55건)
 - (운영실적) 8회 '14년 2회(11,12월), '15년 5회(1,3,6,7,11월), '16년 1회(9월)
- □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 콘텐츠 협력회의
 - (운영기간) '15.10~ * **아문단 주관 운영**
 - (참여기관) 문체부(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市, 한 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광주정보문화산업 진흥원, 국립광주박물관 등 9개 기관
 - (운영내용) 문화전당 유관기관 간 협력.지원
 - (운영실적) 5회 '15년 2회(10, 12월), '16년 3회(2, 4, 8월)
- □ 광주문화기관 협의회
 - (운영기간) '13.5~ * **문화재단 주관 운영**
 - (참 여기관) 문화재단, 비엔날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민속박물관, DJ센터, 문예회관, 시립미술관, 시청자 미디어센터, 디자인센터, 아시아문화원, 광주전남 연구원 등 12개 기관
 - (운영내용)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책제언(정책포럼 등)
 - (운영실적) 39회 '**13년 3회**(9, 10, 11월) / '**14년 12회**(1 ~ 12월) '**15년 12회**(1 ~ 12월) / '**16년 12회**(1 ~ 12월)

2 대선공약 실천방안

□ 공약개요

- 사업기간: 2018~2022년 (5년간)
- 총사업비 : 30.970억원 (국비 18.766 시비 4.054 민자 8.150)
- 주요내용 :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추진(대선공약)
 - ① 문화전당 활성화
 - ② 7대 문화권 조성사업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특별법 명시)
 - ③ 현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효 연장
 - (당초) 2026년 → (변경) 2031년 / 부칙개정 필요
 - ④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목표기간 연장
 - (당초) 2023년 → (변경) 2028년 / 종합계획 수정 필요

□ 현재까지 추진상황

O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TF팀 회의 : '17, 4, 27

O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협의(市 . 문화전당) : '17. 5. 11

○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지역 문화계 간담회 : '17. 5. 19

○ 문체부(아문단) 방문, 국정과제 반영 건의 : '17. 5. 30

O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수정계획 간담회(문체부 아문단) : '17.5 ~ 6

O 유은혜 국회의원 사무실(선보관) 방문, 국정과제 반영 건의 : '17. 6. 5

O 유은혜 국회의원 접견, 국정과제 반영 건의 : '17. 6. 8

○ 문체부 제1차관 접견, 국정과제 반영 건의 : '17. 6. 9

O 국정기획자문위원 의견수렴 회의, 지역공약 설명 : '17. 6. 16

□ 향후 추진계획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초안) 마련('17.7~8)
 - T/F팀 회의개최 ('17.7월중), 조성사업 활성화 방안(최종안) 마련 ('17.8월중)
 - 조성사업 종합계획(수정) 반영 ('17.8~12) *문체부

○ 7대 문화권 조성사업 수정계획 연구

- 중간보고회, 전문가 . 시민 토론회 ('17.7~8)
- 최종보고회 ('17.8월중) / 조성사업 종합계획(수정) 반영 ('17.8~12) *문체부

정부/지역 협력 방안 및 공약실현을 위한 정부역할

소 순 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대통령 공약사항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로그램 개발 및 조성사업 7대 문화권 활성화를 통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 추진

□ 대통령 공약이행을 위한 전당 활성화 및 7대문화권 사업 추진 방향 <전당 활성화 방안>

- 전당이 문화콘텐츠 기반 중심기관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확대 추진
 - 전당 내 '아시아문화아카데미'를 국제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육성
 - 국제적 다분야(연구, 교류, 창제작, 문화기획, 공연 등) 전문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및 전당 내 체류를 위한 통합 레지던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아사아 문화역량 강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추진
 - ACC 주도 아시아문화예술 네트워크 추진결과물의 국제마켓 진출 및 글로 벌 문화예술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아시아문화전당 내 4차산업 창의콘텐츠 플랫폼 '예술기술융합센터' 조성
- 전당장 선임 절차 조속 추진
 - 그동안 4차에 걸친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어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
 - 전당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를 선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전당과 아시아문화원간 이원적 업무추진 구조개선 검토
 - 전당과 아시아문화원간 이원적 업무체계로 인한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 다수
 - *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및 전문가 대부분 동의
 - 우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 모색, 추후 법인화 등 조속한 일원화를 위한 방안 검토 추진

-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 복원) 정상화 문제 적극 대응
 - 대통령께서 "전남도청 복원문제는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씀하심. 문체부도 충분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대책위 및 광주시, 전당 등과 협의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7대 문화권 사업 추진 방안>

- 사업추진배경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내 지역성과 역사성, 발전성을 토대로 문화적 현상이 특화되는 핵심지역을 설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사업
 - *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 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경관·생 태환경 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 그동안 추진경과 및 문제점
 - 조성사업 핵심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추진에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광주의 지역특성과 기능을 고려한 문화도시 기반 조성 및 7대 문화권 등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개발 및 투자 실적 저조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민 자
전체계획('04.~'23.)	52,912	27,679	7,896	17,337
전체 집행('04.~'16.)	12,480(23.6%)	11,199(40.469%)	781억원(9.9%)	500(2.88%)
7대문화권(계획)	11,188	4,103	3,347	3,738
7대 문화권(집행)	366(3.3%)	202(4.9%)	164(4.9%)	-

- 종합계획 반영사업 및 광주시 연차별실시계획 수립 사업의 예산반영 미흡 • 총 발굴사업 24(추진중 3, 완료4, 미추진 17)
- 문화전당 개관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아문단 조직 축소, 광주시 조성사업 발굴 및 확대 개발 전담인력 부족
 - 아문단 인원 8(4급 1, 5급 4, 6급 2, 전문임기 1), 광주시 전담(6급 1)
- 사업추진 현황
 -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7대문화권 조성사업 수정계획 연구T/F』에 우리부 참여(간담회의 참석 및 자문단 2명 추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종합계획 반영)
 - 7대 문화권 조정, 사업 발굴 등 타당성 및 구체적 추진 방안 보완

- 광주광역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포럼)와 추진방향 및 조정범위, 전략 적 사업 발굴 등 긴밀한 혐의 절차를 통해 추진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정보완 연구용역 발주('17. 7~12월)
- 향후 추진계획 및 협조사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 문화권 등 조성사업 콘텐츠 개발 TF팀 구성·운영 검토
 - 문체부, 광주시, 민간 전문가(관광, 생태, 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로 구성, 사업개발 및 모니터링
 - ⇒ 광주 시민단체, 예술단체, 지자체(광주광역시 구별 등)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문화특성, 실현가능성 등 고려한 신규 사업 중점 발굴 추진
 - ⇒ 7대문화권 조성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집중 토론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도출
 - 문화전당과 연계한 7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 사업 개발 추진 문체부·광주광역시·문화전당 등 관계기관 정례협의회 개최(격월)
 - 광주시 7대문화권 사업 종합관리 및 사업발굴을 위한 전담(T/F)팀 구성 관련 인력 확보 협조요청(사무관1, 주무관1)

□ 조성사업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본부 직제로 이관 편성 추진
 - 그동안 추진단이 축소 된 가운데 본부외곽(파견) 조직으로 되어 있어 체계 적, 효율적 조직운영에 한계
 - 현재의 추진단을 본부로 이관하여 실-국-과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광주시 와의 협력 및 전당의 실질적 관리 및 지원 강화 역할 기대
 - * 향후 전당-아시아문화원 일원화 계기 시 아문단 조직 확대(국장급) 추진
- 문체부 전당 광주시와의 업무협력 및 소통강화
 - 문체부·광주광역시·문화전당 등 관계기관 정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 활성화 및 전당의 전시 및 창·제작 참여 확대 방안 논의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7 생통포럼(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 포럼)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7년 7월 13일

인 쇄.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7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